

# 尹 기자회견... 의혹 해소될 때까지 질문 받는다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입장 밝힐 듯 명태군씨 논란, 유감 표명 가능성 임기 반환점... 향후 국정방향 제시한 “국민 눈높이 맞는 담화 되길”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시간 제한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질문받고 소상하게 답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군씨와의 통화 녹취 등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정국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을 돌아 보고, 향후 2년 반의 국정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질문이 더 나오지 않을 때까지 다 받고, 질문에 대한 입장을 최대한 소상하게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명 씨와의 관계로 인해 빚어진 일련의 논란에 대해 유감 표명 등 사과를 할 가능성도 나온다.

김 여사 문제에 관해서는 담화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질문이 나오면 답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향후 외교 정책 방향, 집권 하

반기 주요 경제 정책 및 4대 개혁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 외교 무대의 굵직한 행사들이 끝난 뒤 이달 하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인적 쇄신 요구 등에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 미루는 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명태군 씨와의 통화 녹취 공개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

까지 했다.

여기에 최근 국정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며 10%대로 떨어지는 등 국정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도 기자회견 시점을 앞당기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오후 10시께 공지로 기자회견 날짜를 알렸다.

공지 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 빠르면 좋겠다고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 눈높이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

실을 방문해 기자간담회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선 “저는 (추 원내대표가 방문한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시작된 미국 대선 투표와 관련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정부는 잘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 대선은 국제 정세뿐 아니라 세계사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는 투표라는 평가도 있다”며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중국, 러시아, EU(유럽연합),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국제정세가) 많이 바뀌고, 향후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조국, 내일 목포서 특강 후 호남 첫 ‘탄핵다방’ 운영

### 남약중앙공원 ‘2호점’에 참석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7일 국립 목포대 도립캠퍼스 70주년 기념관에서 특별 강연을 한 후 전남도청 소재지인 남약신도시에서 ‘탄핵다방’ 2호점을 운영한다.

특강은 목포대 학생들의 직접 초청으로 이뤄졌고, 탄핵다방은 지난 2일 대구에서 1호점을 운영한 데 이어 두번째다.

5일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특강은 ‘조국의 사회권 선진국,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청년 세대의 현재를 진단하고 조 대표가 오랫동안 천착해 온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자신의 확신과 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관련 정책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사회권’ 강화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권이 어떻게 시민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토대로 한 청년 세대의 청사진도 제시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특강 후 남약중앙공원에서 열리는 ‘탄핵다방 2호점’에 참석할 예정이다. 남약중앙공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을 비롯, 전남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일대기와 업적 등이 새겨져 있는 흉상이 설치돼 있으며, DJ정신을 기리는 김대중 광장이 위치한 상징적인 장소다.

조 대표는 이 곳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동상에 헌화한 후 오후 5시30분부터 ‘탄핵다방’을 통해 목포·무안 주민들과 직접 만나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탄핵의 절박함과 그 당위성을 피력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대구, 목포를 비롯해 서울, 전주, 광주, 경남 등 전국을 순회하며 탄핵다방을 열고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 고흥·신안 등에 ‘지방소멸기금’ 160억 지원

고흥과 신안 등 인구감소지역 중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점 사업을 발굴한 우수 지자체에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추가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지자체가 투자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 후 배분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4단계 등급 평가로 나눠 인구감소지역에 64억~

144억원, 관심지역에는 16억~36억원을 배분해왔다. 그러나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에 72억원을 기본 배분하되, 이 중 우수 지역 8곳에는 88억원을 추가 배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평가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 실적과 전년도 성과 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 주요 정책 사업과의 연계·협력 여부도 고려했다.

평가 결과 인구감소지역 중 고흥군과 신안군, 남원시, 단양군, 보령시, 청도군, 하동군, 횡성군 등 8곳과 관심지역 중 김천시와 포천시 등 2곳이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승원 법사위 1소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

## 3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야당 “오는 14일 본회의서 처리” “민심 떠나야 정신 차릴텐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17일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두 차례 폐기를 겪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군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추가했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의 부당성을 따지며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법안 심의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소수의 정치 세력이 특검을 고를 선택권을 다수의 정치 세력이 배제하거나 일방적으로 특검을 고르는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건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굉장히 집중된 사안이다.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당에 주면)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수사할 검사를 자기 고르겠다는 얘기랑 똑같다”며 “권력을 쥔 여당과 대통령이 (대통령의) 배우자 보위를 위한 특검을 지명하고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반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에 특검 내용에 협상 여지를 열어 두고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란다”고 한 대표를 압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가운데 민심이 완전히 떠나고 나서야 정신 차릴 생각이나”며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과 추천 권한 등 내용을 두고 얼마든지 협의와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김건희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에 관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와 야당 추천 권한 등을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 여 격차해소특위, ‘65세 정년 연장’ 법안 내년 초 발의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5일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위에서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을 연초에 발의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3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 모였다”며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연동하는 규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광주시의회, ‘AI디지털 교과서 정책토론회’ 연다

광주시의회는 7일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혁신인가 졸속인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전남시민연대를 비롯한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해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임태형 미래

학습혁신연구소 대표의 ‘AI디지털 교과서 시대, 교육과 기술의 상생 방안’ 발제를 듣는다. 발제는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 장·단점을 점검해 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도입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에서는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의 외국 사례를 통해 충분한 검증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명진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2대 국정과제에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음에도 도입이 결정돼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에 혼란과 문제를 줄이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